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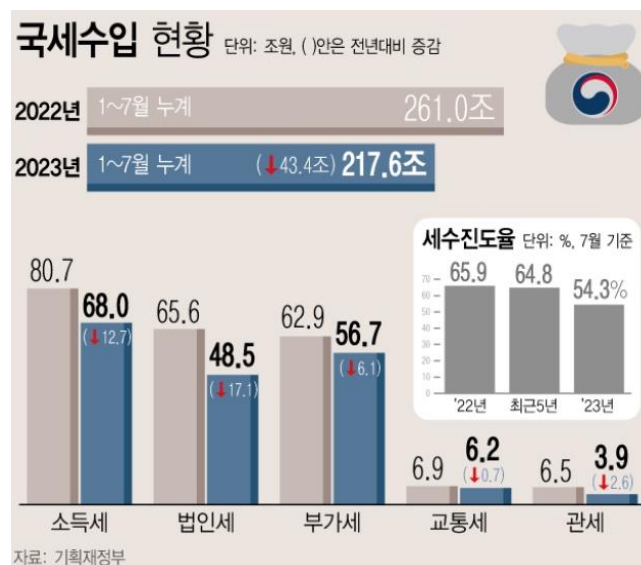
Buysignal 이슈 토의: 세수 비상

10기 4조/2023.09.23

-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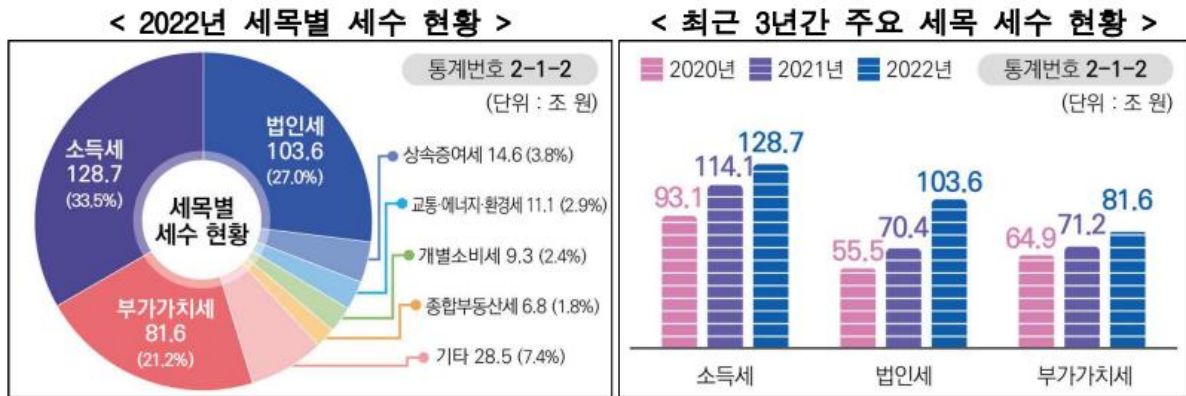
1. 개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 감소했다. 주요 감소 부문은 법인세에서 -17.1조원, 소득세에서 -12.7조원을 기록했으며 부가세에서는 -6.1조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기재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세수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올해의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9월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400조5000억원에서 341조400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기존 예산 대비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망치보다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2. 등장 배경

이번 세수 오차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진 것,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 지표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른 항목들보다 경기의 영향이 뒤늦게 나타나거나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의 증가가 세수의 증감률을 주도하게 되면서 전체 세수 오차율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세수 오차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2010~2019년 우리나라 평균 세수 오차율은 4.8%였으나 2020~2022년에는 11.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7.2%→8.9%), 영국(2.2%→12.7%), 일본(6.3%→8.6%), 독일(1.8%→7.4%) 등 주요국들도 상당한 변동 폭을 보였다.

[주요국의 세원별 세수오차율]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2010~2014	5.4	3.3	13.0	3.2	10.8
2015~2019	5.4	4.5	13.0	4.6	3.9
2020~2022	12.3	8.8	32.7	8.6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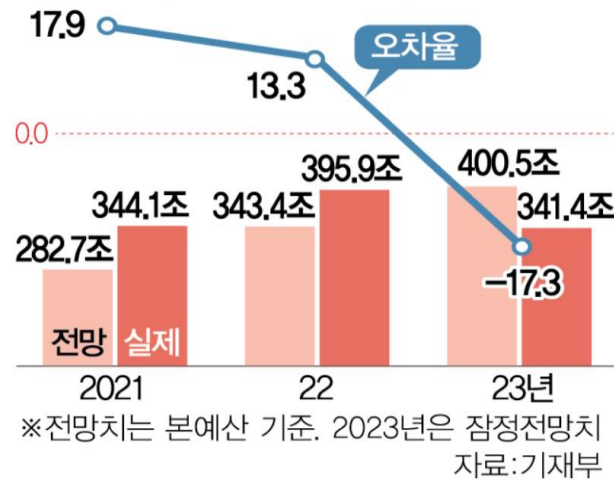
주: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등 5개국의 세원별 세수오차율 절댓값의 평균임
 자료: 각국의 예산안과 결산 자료(정부의 재무보고서 등)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번 세수 결손 사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자산과 관련된 세수의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관련 세수는 급감한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5% 정도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약 22.0%로 확대되었으며 작년 2022년 기준, 세목별 세수 중 27.0%까지도 확대되었다. 자산 관련 세수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24조4000억원 대비 8조 8000억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2000년 이전에는 총 국세에서 7.1%였던 자산 관련 세수의 비중 역시 2020년 이후 15.9%로 확대되었다.

3. 선정 이유

현재 세수 오차율은 2000년대에 들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7.8%, 13.3%라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직전 2년간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결손이 생겼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 해에 50조~60조 원대 세수 오차가 3년째 이어지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며,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세수 전망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과 개편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세수오차 및 오차율 (단위:원, %)



세수 오차는 국가의 재무 구조를 비롯해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먼저,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수 펄크는 재정 지출을 무리하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예산 자체는 물론이며 예산에 기반한 각종 국가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높으며, 초과세수로 인해 시차를 두고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시간 부족으로 인해 추경 편성이 심도 깊게 이루어지기 힘들며 무리한 징세 행정과 기금 재원의 편법적 활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올해에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화된다면,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당 이슈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높은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발생한 것에 대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본론

4. 이슈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세수 펄크 규모가 최대 50~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	2022년 실적(조원)	2023년 예산(조원)	7월까지 누계 세수(조원)			7월 진도율(%)		
			2022년	2023년	증감(증감율)	2022년	최근 5년	2023년
총국세	395.9	400.5	261.0	217.6	-43.4(-16.6%)	65.9%	64.8%	54.3%
소득세	128.7	131.9	80.7	68.0	-12.7(-15.8%)	62.7%	61.9%	51.6%
법인세	103.6	105.0	65.6	48.5	-17.1(-26.1%)	63.3%	60.2%	46.1%
부가가치세	81.6	83.2	62.9	56.7	-6.1(-9.7%)	77.0%	75.6%	68.2%
기타	82.0	80.4	51.8	44.4	-7.4(-14.3%)	최근 5년: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월사평균 진도율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세수입 실적인 395.9조원보다 4.6조원 높은 400.5조원을 2023년 세입예산으로 설정했지만, 7월까지 걷힌 세수만 놓고 본다면 남은 기간 동안 182.9조원의 국세를 더 걷어야 목표 예산 달성이 가능하다. 현재 진도율은 54.3%로, 최근 5년 진도율이 64.8%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올해 남은 기간 작년과 같은 규모로 세수가 들어온다고 가정

해도 예산 대비 48조원가량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수결손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이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여겼던 연초 전망과 달리, 경기 수축국면이 길어지면서 기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 결손은 더욱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세수 핑크가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5. 발생 원인

일반적으로 대규모 세수 오차는 경기순환 국면이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에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적인 요인이 세수 오차의 일차적인 원인이고, 경기 후행성이 강한 법인세와 거시 지표로 예측이 어려운 자산 관련 세수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며 세수 오차 역시 커진 것이다. 세목들을 살펴보면 국세 수입의 약 79.6%에 달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전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각각의 세목에서 결손이 발생한 이유를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5-1.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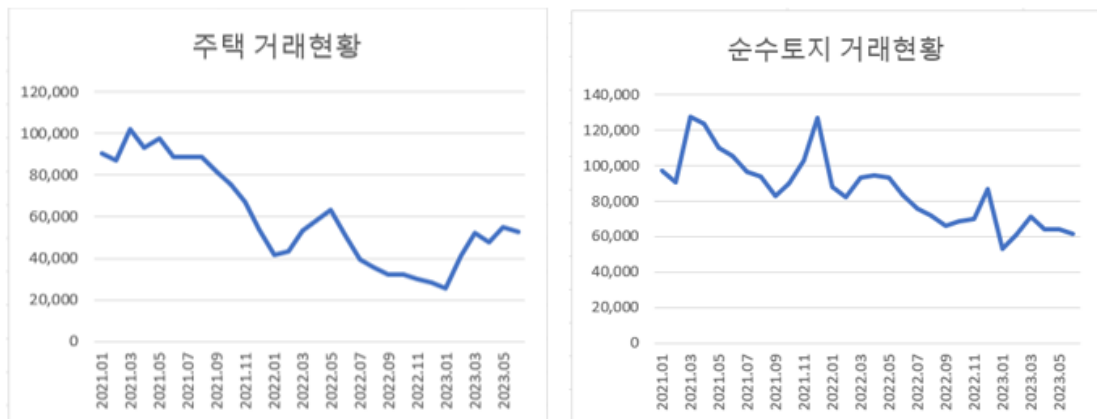
결손의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법인세로 전체 결손액에서 39%의 비중을 차지한다. 7월까지 법인세는 총 48.5조원이 걷히며 전년동기(65.6조원) 대비 17.1조원이 감소했다. 진도율도 46.1%로 꾸준히 60%를 넘어오던 세목들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법인세의 감소는 올해 상반기 수출부진,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법인세수의 20%가량을 차지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특히 부진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는 전년동기 대비 95.4% 감소한 1.3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SK하이닉스는 6.3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법인세 비용을 약 2400억원으로 책정했고, SK하이닉스는 -1.7조원으로 책정하였다. 작년 각각 7.1조원, 1.9조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올 하반기 경기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못한다면 세수 핑크가 내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서 법인세 중간예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음해 3월까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 매년 8월 말까지 법인세를 중간 납부한다. 중간예납 방식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이고, 나머지 방식은 당해 연도 상반기를 토대로 법인세를 산출하여 내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세무비용 등을 감안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을 채택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나쁠 경우 상반

기를 토대로 법인세를 산출해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후자의 방식으로 중간예납을 한다면 지난해에 비해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혹여나 기업들이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여 올해 법인세 수입에서 큰 핑크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올해 부진한 기업 실적이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될 것이다. 중간예납 후 하반기에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하면 중간예납에 따른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액이 늘어나면서 수 조원 대의 법인세 결손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5-2. 소득세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2.7조원 감소하였다.



부동산시장 냉각으로 인해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6.3%, 36.4%씩 감소하였고, 부동산 거래가 둔화함에 따라 감소한 양도소득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11월까지였던 소규모 자영업자의 중간납부기한을 2022년 2월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정 지원을 펼치며 지난해 2월까지 걷은 종합소득세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기저효과도 전년동기 대비 걸린 종합소득세가 2.4조원 감소한 효과를 가져왔다.

5-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총 6.1조원이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의 감소는 수입액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7월까지 수입액은 487억달러로 전년동기(653억달러) 대비 25.4% 감소하였다. 수입의 감소는 부가가치세 감소뿐만 아니라 관세의 감소(0.5조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국세청에서 펼쳤던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의 세정지원 정책들의 기저효과 또한 부가가치세 감소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6. 정부의 대응: 외평기금을 통해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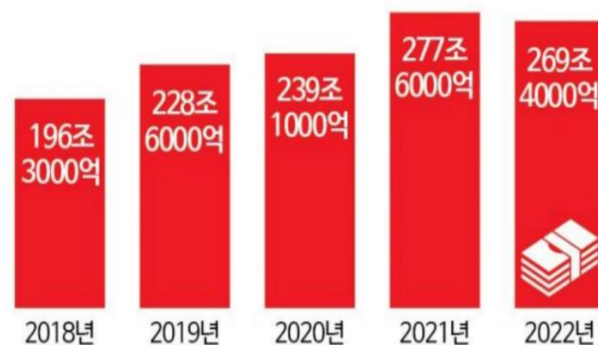
6-1. 외평기금이란?

외평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줄임말로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매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땐 보유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고, 반대로 환율이 내리면 갖고 있는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입한다.

6-1-a. 외국환평형기금 자산 현황

외국환평형기금 자산 현황

(단위: 원, 자료: 홍성국 의원실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및 외평기금 재무제표 재구성))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자산 규모는 269조 4000억원이다. 이중 순자산 2조 400억원을 제외한 267조원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부채이다.

6-2. 왜 외평기금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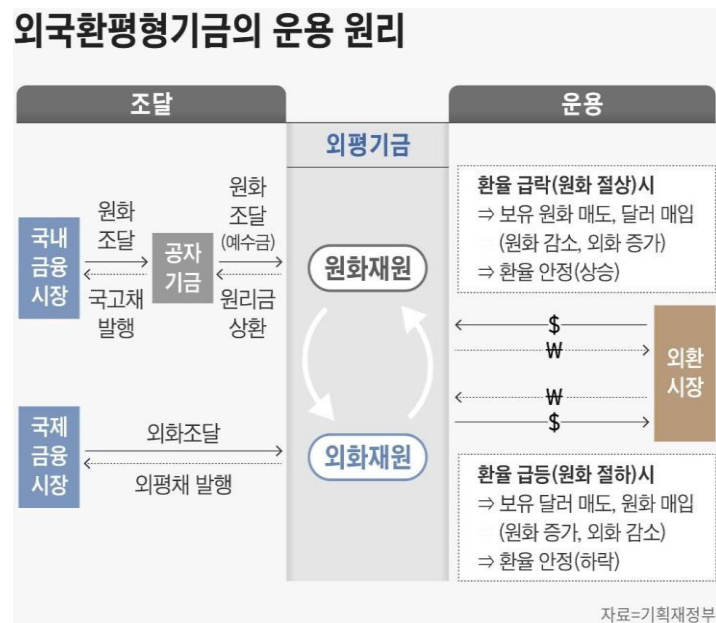
우선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어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시장에 혼란이 야기되어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시중 금리가 상승하게 될 우려가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부터 급격히 상승해 온 원달러 환율 때문에, 외환당국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해 외평기금이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구체적인 기금의 운용 상황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 환율이 높은 상황이라 원화 약세를 완화시키고자 위와 같이 외평기금을 운용하였다. 즉, 이로 인해 원화가 충분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원화를 쓸 일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평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가능하다. 다시 말해, 환율 이 단기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달러를 매입하고 원화를 팔게 될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6-3. 정부의 계획은?

정부의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는 '외평기금 동원'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의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보내고,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자면 공자기금은 각 예산과 기금의 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여타 여유 재원이 있는 회계 및 기금에서 '예금'처럼 돈을 받아 굴려주거나, 부족한 회계·기금에 '대출'을 내주는, 마치 정부 내 '금융기관'(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자기금'이 존재한다. 공자기금은 60% 정도의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공자기금은 이렇게 마련한 돈을 일반회계나 각종 기금에 빌려줄 수 있다. 빌려준 기금으로부터 당연히 이자도 받는다. 이렇게 내주는 대출금의 절반 가까이를 빌려가는 곳이 바로 외평기금이다. 따라서 정부는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지고 있던 빚을 일부 조기 상환해 공자기금을 불리고, 이를 다시 일반회계로 이전시켜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용도로 쓸 구상을 하고 있다.



6-3-a.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 외환시장 급변에 대한 위험

하지만, 정부의 세수 감소 대책으로 내세운 “외평기금 활용에 대한 정책”은 리스크가 다수 존재한다. 위의 계획대로 하면 외평기금이 단시간에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덧붙여 내년 기금 운용 계획표를 보면 추가로 20조원을 더 빼기로 되어 있다. 세수 부족분과 내년에 필요한 비용까지 더해지면 대략적으로 약 40조원이 줄어드는 격이다. 따라서 환율 급락 시 달러 구입 후 진정시켜야 할 원화가 부족하며, 외환시장이 급변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 또한 한 치 앞을 모른다 할 정도로 불안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에, 안전판 기능을 하는 외평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클 수 있다.

7. 추가진행현황

7-1. 세계잉여금 및 예산불용액 활용

중앙정부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공자기금을 제외하고 불용과 세계잉여금이 추가적으로 있다. 불용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방법이다. 세계 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를 말한다. 세계 잉여금으로는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의 일반회계 잉여금 6조원 가운데 출연·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여윗돈은 2조8천억원이다. 자유로운 활용에 제한이 있는 특별회계 잉여금 3조 1천억원까지 최대한 활용한다면 5조9천억원이다. 불용은 통상적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규모가 1.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약 10조원대 초반 수준이다.

7-2. 지방교부세 급감

18일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당초 올해 지자체에 내려올 지방교부세(금)는 75조3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11조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23조 원에서 11조60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 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감소분이다. 지방교부세(금)는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면 연계 조정이 불가피하다. 지자체들은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 가능한 정책 등을 추려 집행 가능 예산으로 과감히 변경·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 결론

8. 외평기금 사용은 MMF 자금 유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연기금 투자풀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43.2%, 다음으로 채권형이 전체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외평기금 예탁금의 구성도 연기금 투자풀 포트폴리오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외평기금으로부터 20조원을 조달할 것이라 밝혔으므로 20조원의 약 40%인 8조원가량이 MMF에서, 약 30%인 6조원이 채권형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해볼 수 있다. 한편 외평기금은 원화자금을 운용할 때 주로 단기금융상품인 MMF를 더욱 선호하는데, 외환시장 급변 시 바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외평기금이 주로 MMF로 운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환매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 MMF 자금 유출은 단기자금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MMF 환매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3일부터 단기자금시장의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서울 채권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업어음(CP) 91일물 고시 금리는 4.000%로 전일 3.990%에 비해 1bp 올랐다. CP 금리는 지난 7월 6일부터 3.990%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약 두 달 만의 상승

이다. 통상 3분기 말은 추석과 겹쳐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단기자금시장이 약세를 보이지만 외평
기금 이슈로 시장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이다. 또한 국고채 만기 도래, 은행채 부담 이슈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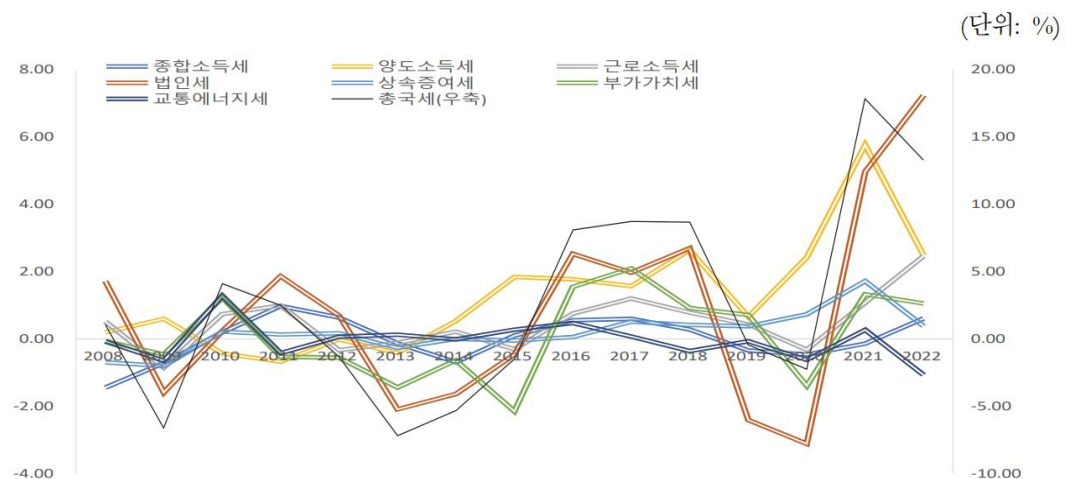
9. 세수오차 해결방안은?

어느 정도의 세수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세수오차가 반복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가 하락하고 재정운용상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히 근 3년 간 세수 오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 위기로 경기침체를 예상 했었으나, 주요국의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 등으로 경기가 빠
르게 회복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경기 상승이 세수오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자체적인 노력은 국회가 심의 · 의결한 예산과 달리 집
행하는 재량행위로, 그 규모가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추경편성은 촉박한 심사일정으로
인해 감액사업 심사 등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세수예측
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9-1. 세목별 오차율

오차율의 세목별 기여도는 $[(\text{세목별 세수실적}t - \text{세목별 본예산}t) / \text{총 국세 실적}t] \times 100$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전체 오차율에 대한 세목별 기여도는 법인세의 기여도가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가장 높고, 2015년 이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져
이들 두 세목이 전체 세수오차율을 주도했다.

[오차율 세목별 기여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세수오차율이 증가한 이유는 법인세와 자산세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법인세는 경기 후행성이 강해 예측하기 어렵다. 예시로 올해 정부는 상저하고를 가정하고 세입 정책을 폈으나, 3분기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오차가 발생했었다. 또한 법인세는 정책 변동에 민감하다. 잦은 세율 개편이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자산관련 세수도 마찬가지로 예측하기 어렵다. 수익 양상 다변화가 세수변동률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와 자산세의 총국세 대비 비중이 커진 것이 전체 세수 증감률에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이전과 2020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법인세가 12.5%에서 22.0%, 자산세는 7.1%에서 15.9%로 증가했다.

9-2.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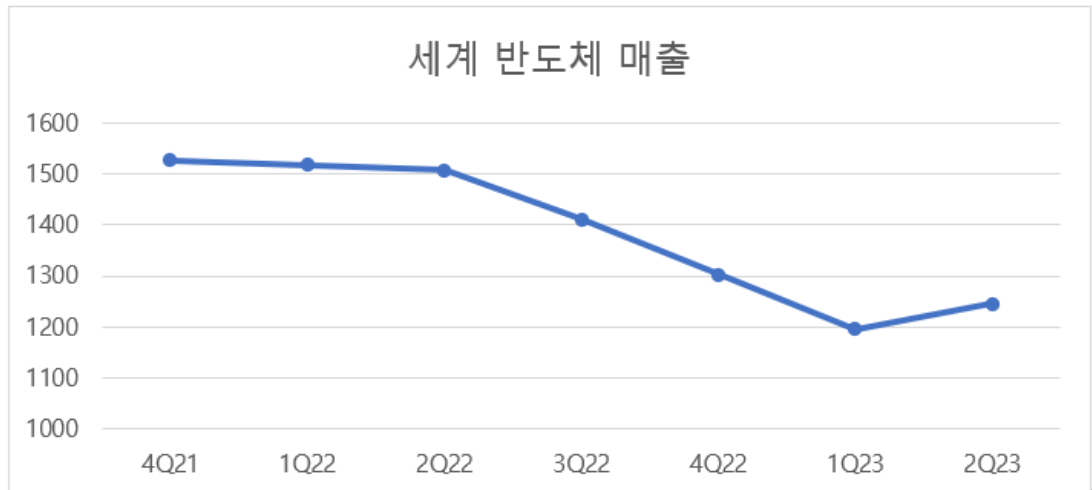
과거에 비해 경기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정책변경 또한 잦아졌다. 또한 변동성이 큰 세수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세수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상황에 맞게 모형 결과를 활용하는 한편, 오차의 사후분석을 통한 전망 전제 및 방법의 주기적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전망 시 기업 재무제표 정보 활용 및 산업별·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기획재정부가 세입전망을 담당하고 있는데, 세입정책과 세출예산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전망에 정부의 정책의지 개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캐나다 등은 재정전망시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망의 객관성을 높이거나 행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세입전망을 위해 감시 장치를 마련하거나 민간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0. 향후 이슈 예측

10-1. 세수 부족 올해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듯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보인다. 세수 부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가지 요인인 반도체 산업과 부동산 및 자산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WSTS)가 발표한 2분기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을 1,245억 달러이다. 이 수치는 15개월만에 전 분기 대비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한 수치이다. WSTS가 내년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률을 11.7%라고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전년도만큼의 매출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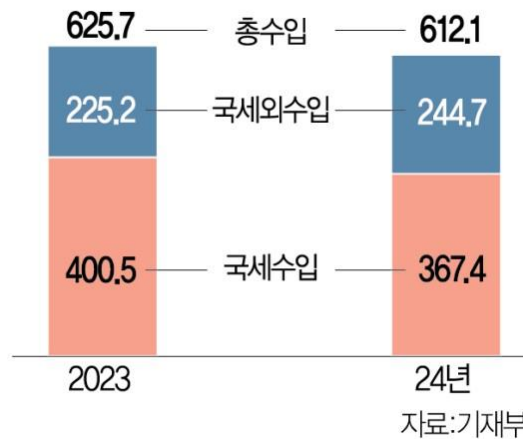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감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며 세수 부족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의 투자한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10% 추가적인 공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내년에 발생하는 감세혜택은 2조 2,000억원일 것으로 추산되며 이후에도 연 1조원 수준의 감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및 자산시장의 침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체의 원인인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9월 14일에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8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킨 데에 덧붙여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도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2. 2024년도 예산안 발표

위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 8월 29일에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을 367조 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인 400조 5,000억원에 비해 33조 2,000억원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법인세가 2023년도 예산안에는 104조 9,969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024년도 예산안에는 77조 6,649억원으로 26% 감소한 수치를 예상했다.

총수입 현황 (단위:조원)



이에 맞춰 총지출의 증가율도 크게 감소한 모습이다. 2024년도 예산안의 내년 예산 총지출은 656조 9,000억원으로 2023년도 총지출 대비 2.8%가 늘어난 수치이다. 2022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8.9%, 2023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5.1%임에 비하면 예산 증가율이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내외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지출의 추가적인 축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수 부족과 함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며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2020년에 123조 4,000억원, 2021년에 124조 1,000억원, 2022년에 62조 7,000억원이 증가하며 2022년 결산 기준 1,033조 4,000억원의 국가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역시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상했던 국가채무 수준인 1,101조 7,000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며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도에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때문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대두되고 있다. 전경련에서는 재정건전성 경고등, 미래 재정여력 위축, 미래 지출수요 급증, 잠재적 국가부채 위험,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이렇게 다섯가지 이유를 통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계류가 계속되고 있다.